

광주시·전남도, ‘향토기업 우대 조례’ 폐지 반발

공정위, 광주 LED·전남 밀 조례 등 폐지 논의

“지역기업 보호·수도권 집중 방지 위해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치단체의 ‘향토기업 우대 조례’를 차별적 규제로 보고 폐지하기로 해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차별적 규제로 광주·전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촉진 조례, 전남의 밀 산업 육성 조례 등을 꼽았으며, 이 외에도 차별적인 조례가 상당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향토기업 우대 조례는 열악한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영세 향토업체의 도산, 기업유치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시·도 관계자의 말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음달 14

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갖고 폐지할 차별적 규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의 조례·규칙 가운데 사업자 차별, 진입장벽 설정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가 총 2134건(광역 228건·기초 19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1507건(광역 68건·기초 1439건)보다 627건(41.6%)이나 늘어난 수치다.

공정위는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유형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진입제한 규제가 9건이었고 가격제한 2건, 사업활동제한 5건, 차별적 규제 22건, 기타 규제 6건 등이 있었다. 공정위 의뢰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한국규제학회도 이 가운데 22건은 폐지하고 23건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진입제한 규제 9건, 가격제한 3건, 사업활동제한 3건, 차별적 규제 16건, 기타규제 3건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학회는 이 가운데 19건을 아예 폐지토록 권고했다.

광주, 전남, 대구, 충남, 전북, 경북 등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촉진 조례에 도지사가 LED 조명 교체 시 지역생산 제품

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폐지 권고 대상에 올랐다. 광주·전남 등 대다수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있는 지역 건설산업 우대 조례도 포함됐다. 또 전남의 밀 산업 육성 조례, 부산의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등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개선 또는 폐지 대상으로 꼽혔다.

다만, 규제학회가 경쟁제한적 규제로 꼽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형마트 신규 입점 제한, 담배소매점 거리제한 등의 규제는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마저 없다면 기업 유치는커녕 지방에 있는 기업도 (수도권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알기쉬운 선거법 <6> 광주일보-광주선관위 공동캠페인

문자메시지 가능 ... 음성·화상·동영상은 불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은 어떻게

◇언제 가능하나=예비후보자는 물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자만 가능하고,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보낼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SNS는 선거법상 전자우편이므로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보낼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에 의한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하나의 송신 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된다.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다.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어떤 경우가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에 해당되나=전화기의 자

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그 수신 대상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전화기의 전송 프로그램을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동보통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수신 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상 횟수가 제한되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법정횟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유료전송 서비스를 이용해 동시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20건 이하라도 전송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한다.

◇전송 횟수·대상은=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이 용 선거운동과 같이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전송할 수 없다.

◇사람을 고용한 전송 가능 여부=아라바이트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

주승용 전남 서부권 민심잡기 행보

동교동계 연쇄 접촉이어 이회호 여사 면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주승용 의원이 전남 서부권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동교동계 인사들의 측면 지원을 연결 고리로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국민의 정부에 강한 향수를 지닌 서부권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 의원은 지난 25일 현충원을 방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이회호 여사와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회호 여사는 전남지사 도전에 나서는 주 의원에게 “꼭 승리하길 바란다”는 덕담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덕담이지만 이회호 여사가 직접 ‘승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지난날 박지원 의원, 권노갑 고문, 김옥두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의 연쇄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부권의 중심인 목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주에 주승용 의원을 두 차례 만났었다”며 “동교동계 일부 인사들이 주



의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목포 정치권 인사들의 주 의원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박심(朴心)은 무심(無心)이며 중립”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과거 주 의원이 끝까지 나를 도왔다는 점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해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양수 전 의원도 주승용 의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김옥두, 국창근 전 의원 등도 주 의원에 대한 지원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과거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동교동계 인사들의 주 의원 지지 움직임은 전남 서부권 민심의 관심을 모으면서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gnju.co.kr

배기운 상고심 선고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민주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민주당 배기운 의원과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선고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배 의원은 24일, 성 의원은 20일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고 상고 이유 보충서를 제출하겠다고 오는 27일 예정된 선고기일의 연기를 신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규 변호인 선임으로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하겠다는 연기 신청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통상한 차례 허용해주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朴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필요하면 할 수 있다”

독일을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된다면 핵문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열린 입장에 있다. 그것이 일관된 우리의 방침이고 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그러나 이것이 단지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된다든지, 이벤트성 대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상회담의 전제를 분명히 밝혔다.

/연합뉴스

나란히 앉은 한미일 정상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합의

헤이그 정상회담서 ... 북핵 비핵화 긴밀 공조

한미일 3국 정상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접휴입’ 상태였던 북핵 6자회담이 재개의 단초를 찾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년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대북 현안의 해결을 위한 3국의 긴밀한 공조 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미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란히 앉아 북핵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연합뉴스

요성을 확인했다.

특히 3국 정상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서 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브리핑에서 전했다.또 3국 정상은 북한이 핵무기와 무관한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중국이 대북 설득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협

력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는데도 3국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3국을 이간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및 3국간 안보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2008년 이후 5차례 실시된 ‘한미일 안보토의’(DTT)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DTT는 이르면 다음 달에도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5P - 13층

- 실평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 매매가 - 3천2백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29P - 사무실 적합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전체 올수리(방2,거실)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1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천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1대1 개인지도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독/공동투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지급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비용으로 처리